

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2025.3.31.(월)	보도자료 담당: 정책위원회 연락처: (02)6788-2606
--	--

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 제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 -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개탄, 규모도 납득 안 돼-

- 정부는 지난 30일 ① 재난·재해 대응 ② 통상 및 AI경쟁력 강화 ③ 민생 지원 등에 집중한 10조원 규모 추경을 제시하면서, 여야가 ‘동의’ 하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.
- 그러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이견 사업이나,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,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부연하였습니다.
-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 제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.
- 첫째, 정부가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3월말이 되어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로 제출한 것도 아니고 여야에 동의를 구하는 추경을 제안한 것에 대해 개탄합니다.
- 계엄 이후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항공기 참사, 산불화재 등으로 긴급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. 여야는 지난 18일 정부에 3월 중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데 합의했고, 정부의 조속한 추경편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.
- 국민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다가 이제야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는커녕 규모만 확정하고 여야가 동의하라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며,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규정한 헌법에도 반합니다.
- 둘째,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.

- 지난 3월 18일에 OECD는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.5%로 대폭 하향하였고, 1%에도 못 미칠 수 있다고 보는 해외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도 있습니다. 그만큼 한국의 경제상황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.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‘필수’라고 하는 추경규모로 10조원을 제시하였는데,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.
 - 또한, 정부가 재난·재해 대응 등에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판단 근거조차 알 수 없습니다. 정부는 산불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서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하는 데 현재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근거와 향후 소요되는 재정의 규모를 먼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.
- 셋째, 뒷북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하면서,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려는 정부의 태도에도 유감을 표합니다.
- 정부가 뒤늦게 추경을 마련해 놓고서는 증액 추진 등 국회의 심사가 걸림돌이 될 거라고 예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.
 -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정부의 추경안을 보완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데, 이를 사전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처사입니다.
 -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가 국회의 추경심사 절차를 시비할 자격도 없습니다.
- 넷째,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.
- 재난재해 대응사업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소요를 파악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충분히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,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이 절실한 상황임을 유념하기를 바랍니다.

2025. 3. 31.



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,
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